社會現象의 微視的 基礎: 經濟學에서의 경우

李 天 杓*

〈목 차〉

Ⅰ. 個別因子와 全體現象
Ⅱ. 부분과 전체에 대한 社會學에서의 다양한 견해
Ⅲ. 經濟學에서의 微視的 基礎의 추구
Ⅳ. 經濟文獻에서의 異端
Ⅴ. 經濟學이 他社會科學에서 배워야 할 것과 經濟學이 他社會科學에 기여할 수 있는 것

Ⅰ. 個別因子와 全體現象

사회현상은 많은 경우 거시적으로 관찰된다. 직관적인 방법 또는 사회현상을 크게 보는 慣行에 따라, 인간행동의 집합이라고 여겨지는 사회현상이 직접 관찰되고 분석된다. 이런 때 그러한 사회현상의 근저에 있다고 생각되는 개별 인간들의 개인으로서의 행위나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되는 動機는 무시되거나, 파악된 큰 추세 속에 묻혀 버린다.

形式論理的으로 생각한다면 사회현상이란 그러한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個個因子들의 행위의 集合이라 할 수 있다. 이들 개개인자들은 각각 나름대로의 目標와 행동양식을 가지고 행위하고 있을 것이며, 많은 경우 어떤 주어진 制約條件下에서 활동하고 있을 것이다. 여러 개별인자들의 행동 중에는 同質的인 것도 있을 것이고 異質的인 것도 있을 것이다. A라는 인자의 행위와 B라는 인자의 행위는 모든 면에서 동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A와 B로 구성된 全體를 고려하는 경우 이들의 행위의 단순한 合計로서 이들의 전체에서의 현상을 파악하여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또 A라는 인자의 행위와 B라는 인자의 행위는 서로 相反되고 異質的인 것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때에는 A와 B로 이루어진 전체에서의 현상이 A의 행위와 B의 행위에 대

*서울대학교 교수, 국제경제학.

한 논리에 의해 규명되기 어려울 것이다. A행위와 B의 행위가 완전히 서로 相殺的인 것으로 되어 全體를 볼 때에는 이들 모두를 무시해도 좋은 경우도 있을 것이며, 부분적으로만 相殺的인 경우도 있을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 異質的인 것이 되어 합쳐 생각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個體로서 인정하고 관찰의 직접적 대상으로 삼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전체는 부분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니와, 부분이 전체를 形成하는 과정에서는 物理的 統合도 있겠으나 化學的 合成도 있을 것이다.

사회과학은 사회현상에서의 규칙성을 발견하고 사회현상을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을 모색하는 학문분야이다. 사회현상을 충실히 연구하기 위해서는 그것의 최하부에서 기초가 되고 있는 個體들의 성격과 행태를 연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개개 개체들의 연구가 어떠한 방도나 경로를 통해 統合되고 合成되어 全體의 사회현상으로 되는지도 연구해야 한다. 개체에 대한 연구를 微視的(micro) 硏究라고 性格지울 수 있다면, 미시적 연구의 결과가 거시적인 사회현상으로 종합·합성되는 실질과 과정에 대한 연구를 微視·巨視의 연관관계(micro-macro linkage)에 대한 연구로 성격지울 수 있겠다. 나아가 전체로서 인식된 사회현상을 연구하는 것에 최종목적을 두고 있는 입장에서는 미시적 연구나 미시·거시의 연관관계에 대한 연구를 모두 거시적 연구로 實朴하게 하는 보조수단 또는 기초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경제학에 초점을 맞추고 거시경제현상의 미시적 기초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한다. 거시경제현상의 인식방법은 경제학이 아닌 다른 사회과학분야에서의 비경제현상에 대한 거시적 인식의 慣行보다는 비교적 정형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경제학이 아닌 다른 사회과학 분야에서 미시적 기초를 탐구할 때 가지는 다양한 견해나 고민에 비해 보면, 경제학에서의 미시적 기초에 대한 탐구노력은 매우 단조로운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경제학에서는 이른바 거시경제모델들이 있어 이들을 통해 거시경제현상을 인식하고 분석하며 처방전을 도출하는 관행이 아주 공고히 정착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거시경제모델들이 과연 합당한 것이냐에 대한 논란은 그치지 않고 있다. 어떤 모델이든 상당수의 가정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모델을 통해 생각해 보려는 現實經濟의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보아 이용되는 거시경제모델에서의 가정들이 과연 정당히 납득되거나 용인될 수 있느냐에 대해 많은 이견이 제시되고 있다. 더불어 여러 개의 방정식을 가지는 연립방정식체계로서 모델을 구축하는 경우 그러한 연립방정식체계에 쓰이는 방정식들이 개별적으로 합당한 것이냐 여부와 그들이 서로 모순되지는 않느냐 하는 것이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거시경제모델에 쓰이는 개별적 방정식이 정당화될 수 있느냐와 관련하여 거시경제학의 미시적 기초가 많이 토의되어 왔다. 어떤 주어진 목적함수(objective function)를 최적화(optimization)한다는 미시경제학에서의 도식을 일단 받아들인 다음, 거시경제모델의 개별방정식이 어떤 타당한 목적함수의 최적화의 결과라고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검토되어 왔다. 나아가 모델에서 쓰이는 여러 개 방정식 사이에서 서로 一貫性을 띠고 있거나 최소한 서로 容認될 수 있는 목적함수들의 최적화가 추구되고 있느냐 여부도 검토의 대상으로 되어 왔다. 서로 상반되거나, 설사 상반되지는 않더라도 아무런 관계가 없는 목적함수의 최적화로 이루어진, 서로 化合할 수 없는 방정식들을 가지고 이루어진 모델은 正當한 거시경제모델이라고 인정하기가 어렵겠기 때문이다.

사회현상으로서 경제현상을 총체적으로 보는 시각의 미시적 기초를 음미해 보려는 이 글은 다음과 같은 순서를 택하려 한다. 먼저 비경제현상에 대한 미시적 기초를 다루는 논의, 특히 社會學에서의 논의를 간단히 음미해 본다. 이런 논의에서 哲學的·形而上學的·存在論的 視角을 포함하는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全體와 部分에 대해 다소 추상적으로 논의하고 있음을 살펴본다. 다음, 경제학에서 미시적 기초를 추구했던 종래의 논의를 반추해 본다. 그 방법론에 있어 物理學의 영향을 받은 경제학의 접근방법이 機械的이고 비교적 單線的임을 확인한다. 인간의 행동이 心理的 要因 등 복잡다단한 動機에 의해 지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학에서는 이런 점을 모두 무시하고 利潤極大化라는 너무 단순한 동기에 따라 合理的이기만한 人間像을 끄집어 내고 있음을 기술한다. 그러나 경제학에서의 논의라고 하여 모두 合理性 하나에 전적으로 지배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경제학에서의 미시적 기초의 추구에 대한 표준적 논의에 이어서는 合理性 하나에 지배되는 것에 대해 例外가 되는 狀況을 기술하는 논의도 살펴보아, 경제학이 사회학 등 다른 사회과학으로부터 가지고 있는 지나친 거리감이 모두에게 편안함을 주는 것은 아님을 摘示해 본다. 마지막으로 미시적 기초를 따져봄으로써 보다 확고한 거시현상에 대한 관찰을 할 수 있겠다는 시각 내지 努力과 관련하여 경제학이 他社會科學으로부터 배워야 할 것과 경제학이 他社會科學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을 언급하기로 한다.

Ⅱ. 부분과 전체의 관련에 대한 社會學에서의 다양한 견해

형식적으로 보아 부분과 전체는 각각 달리 분석될 수 있고, 그러한 분석의

결과는 논리적으로 종합될 수가 있다. 성공적인 논리적 종합이 가능한 한 전체는 개인의 합리적 행위 등과 그들의 집합에 의해 훌륭히 설명될 수 있다. 그러나 성공적인 논리적 종합이 가능하지 않다고 볼 때 전체는 전체로서 생명력을 가지는 實體이며 부분의 상위에 존재하면서 부분을 규율하고 규제하는 것이 된다.

中世의 교회나 절대군주시절의 王은 각각 교권이나 왕권이 그 자체로서 주어진 것이며 개인의 권리를 능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Alexander and Giesen, 1987: 5-6). 이러한 생각은 Fichte, Hegel 등 독일의 관념주의자(idealist)와 프랑스의 혁명적 자연주의자(revolutionary naturalist)에 의해 승계되었다. 반면에 J.S. Mill 등 자유주의자들은 개인의 권리를 중시하고 개인의 존재를 전체의 존재의 先決要件이요 기초라고 보았다.

K. Marx에 있어서 사람이란 환경의 산물이요, 부분이란 전체의 피사체에 불과했다. 따라서 사람이나 부분이 서로 다르다면 그것은 환경이나 전체가 다르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K. Marx에 있어서 개인으로부터 사회전체의 근원을 찾는 자유주의자들의 생각은 용인될 수 없었으며, 전체를 탐구하기 위해 개체를 탐구해야 할 필요도 없었다(Alexander and Giesen, 1987 재인용). 이러한 사고방식에서는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 사람이기에 개체의 움직임이 궁극적으로 모든 변화의 동인이 된다고 보는 시각은 용인되지 않았다. 超個人的 構造가 이미 개체 외부에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個人은 스스로 행동함에 있어 개별적 동기를 가지고 있고 이것이 초개인적 구조 속에서 소외를 경험하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構造가 개인 상위에 스스로 주체성을 가지고 존재한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생각은 "사회적 현실은 사실이며 개인에 대해 강제적 관계를 갖는다"(social facts are things that have a coercive relation to the individual)고 말하는 Durkheim에서도 다시 나타난다(Durkheim, 1938). 개인의 행동은 集合的 構造(collective order)의 표출일 뿐이며, 때문에 전체구조를 파악하는 소재로서나 의미와 가치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초월적 관념주의에 반대되는 입장이 미국적 프라그마티즘(pragmatism)에서 기원되고 있다. 예컨대 G.H. Mead(1934)에 있어서 사회현상은 개인들의 행위의 集合에 불과하다. 어떤 개인의 행동은 다른 개인의 행동을 유발하기도 하면서 어떤 주어진 게임의 규칙 하에서 사회현상을 형성해 간다. 초개인적 구조란 존재하지 않으며 개인들의 행위와 그들 사이에서의 상호의존관계만이 존재할 뿐이다. 그 이면에서 개인의 행동이 어떻게 전체사회를 만들어 가느냐에 대한 制度的 고려는 看過되기까지 한다. 이 때의 개

인행동은 合理性 뿐만 아니라 감정에 의해서도 좌우될 수 있는 바, 이 가능성은 명시적으로 인지되기도 하고 무시되기도 한다.

個人의 合理的 行動만으로 조화로운 전체가 이루어진다고 보는 樂觀論은 古典派 經濟學에서도 찾아진다. 여건이 주어지고 合理性을 추구한다는 動機가 전제된 후 개인에 의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市場을 통하여 豫定調和를 이루는 全體社會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사회현상의 각종 패턴이 궁극적으로 개인으로부터 기인하는 경우 개인행동을 사회현상이라는 전체로 연계시키기 위해서는 우연적일 수도 있는 어떤 절차가 필요하게 된다. 부분이 개체가 아니고 외부구조의 반영에 불과한 것인데 그것의 독자성을 인정해야 한다면 이를 위해서는 부분과 전체의 연계성을 조직해내야 하는 어려운 과업을 수행해 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본 부분과 전체에 대한 두 극단은 다섯 가지 다기한 견해로 다시 세분되기도 한다. 個人의 독자적 역할을 부인하고 그것이 구조의 반영에 불과하다고 보는 첫번째 극단; 구조가 영향력을 미치는 이외에 個性(personality)을 가진 사람들간의 상호관계(interaction)도 개인의 행동을 좌우한다고 보는 견해; 이보다는 개인의 행동에 중점을 두어 개인의 행동이 社會化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면서 구조와 상호관계를 이룬다는 견해; 개인의 행위만이 본원적 기초라는 극단적 견해; 이런 개인적 행동이 우연성을 띠울 수 있어 전체로서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견해 등등이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볼 때, 社會現象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全體인 構造로 보고 個人의 行爲에 대해 절대적 근원성을 부여하지 않는 인식이 차라리 個人의 行爲에서 모든 것이 우러난다고 보는 그 반대의 인식보다 社會學의 전통에서는 상대적으로 강하지 않은가 하고 여겨진다.

개인의 行爲, 개인들간의 교섭과 계약, 그것에 따르는 交換狀況 및 전체사회의 形成에 대한 시각이나, 실질적이고 근원적인 것은 個別的 行爲 뿐이며 그런 것이 結合되어 이루어지는 전체현상은 실증적 탐구의 대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시각 등 構造論과 대립되는 입장이 사회학에서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이런 것들보다 더 강건한 시각은 個人行動 이상의 根源的 構造가 존재하고 있으며 개인의 행위가 때에 따라서는 이러한 구조가 요구하는 바로부터 이탈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종국적이고 객관적으로 보면 이런 구조의 반영에 불과하고 구조가 강제하는 바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입장인듯 보인다.

이런 인식을 따를 때 사회현상의 탐구는 구조 또는 全體의 직접적인 탐구가 本體이며, 미시적 현상의 논구는 전체를 탐구하는 데 필요한 補助的인 것에 불과하게 된다. 미시적 현상을 독자적으로 탐구하고 그것으로부터 거시적 현

상을 導出해 내려고 할 필요는 없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構造論으로부터 이탈하여 개인의 동기·심리상태·행태 등을 중시하는 입장도 계속 존재하고 있다. 이들은 미시적 분석을 전체에 대한 거시적 탐구와 연계시키려는 시도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기본 입지를 가지면서, 論理的으로 혹은 實證的으로 그러한 시도를 지속해 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Ⅲ. 경제학에서의 미시적 기초의 추구

경제학에는 신고전파경제학으로 대표되는 이른바 근대경제학도 있고, 정치경제적 고려를 중시하는 마르크스主義경제학도 있다. 후자는 당연히 K. Marx의 부분과 전체에 대한 인식을 따를 수 밖에 없을 것이고, 그에 따라 構造를 중시하는 시각을 가져 경제현상의 미시적 기초의 추구에 별 흥미를 느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널리 쓰이는 用法에 따를 때 경제학은 근대경제학과 동일시되며 논의를 위해 반드시 필요시되지 않는 한 마르크스경제학을 구태여 포괄하려고 하지 않는다. 여기에서도 이러한 용법을 따르기로 하여 경제학을 근대경제학으로 한정하여 인식하기로 한다. 그에 따라 근대경제학에서 부분과 전체를 어떻게 관계지우며 경제현상의 미시적 기초를 어떻게 탐구해 왔는가를 추적해 보려 한다.

근대경제학의 부분과 전체에 대한 시각은 근본적으로 고전파경제학에서의 예정조화설을 기반지우는 시각을 따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個人이 의사결정의 主體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출발점으로 되고 있으며, 그 다음 단계에서 개별주체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여 그 결과로서 경제사회전체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살펴보는 순서를 택하고 있다.

경제학의 이러한 속성은 사회학에서의 두 가지 극단적 시각 중 하나를 택하고 다른 하나를 버린 것과 상응한다 할 수 있다. 두 가지 극단 중 하나를 택했기 때문에 버린 다른 하나는 달리 쓰이지 않는다. 따라서 사회학에서처럼 두 가지 극단을 두고 그런 극단 중 어느 쪽을 더욱 강조하고 다른 쪽을 다소 경시하느냐에 대한 정도의 차이에 따라 多岐한 입장이 나타나게 될 여지도 없다. 경제학에서의 이러한 單純性은 다음의 역시 극단화된 조크를 통해 잘 볼 수 있다.

> 경제학자들은 왜 사람들이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지를 설명하려고 한다. 반면에 사회학자들은 왜 사람들이 아무런 결정도 내릴 수 없는지를 보여주려고 한다. 이러한 비유는 우스꽝스럽다고 할런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흐릿한 정신상태로부터 확 깨어나게 할만큼 심각하고 엄숙한 사실이다.

결국 경제학에서는 부분과 전체의 인식에 대한 고민이 사회학에서처럼 심각하다고 할 수 없다. 부분으로서 개인이 근본이라는 것이 널리 동의되고 있으며, 단지 그러한 부분에 기초하여 전체를 형성하는 방법을 밝히고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데 있어 異論이 있을 뿐이다.

경제학에서는 부분에 대해 탐구하는 微視經濟學이 오래 전부터 발전되어 왔다. 18세기 후반 시작된 고전파경제학에서의 전통이 계속 어디선가에서 이어져 나오고 있으면서 個體로서의 企業이나 家計의 合理的 行爲를 탐구해 왔던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전통에서도 경제전체를 이야기하기도 했고 전체경제의 成長에 대해 논의하는 부분도 있다. 그러나 그런 논의에서 전체는 個體의 單純한 集合에 불과했으며, 개체가 모여 전체가 되면서 개체에서는 없었던 새로운 성격이 새로이 전체에서 나타나거나 개체에서는 발견되는 속성이 전체에서는 없어지는 일은 심각하게 고려되지 않았다. 개체의 단순한 집합으로서 전체를 인식하는 데 있어 부분과 전체를 연관지우는 합리적 연결고리가 있기만하면 충분한 것이었으며, 이 둘 사이에서 어떤 質的 變換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고려 밖이었다.

1920년대 후반 경제공황에 임하여 미시적 경제현상의 기계적 연장으로 거시적 경제문제를 풀어 보려던 이러한 전통적 생각이 반성되게 되었다. 그 결과 1930년경에 거시경제를 직접 직관하여 전체를 파악한 뒤 그러한 인식에 의거하여 전체에 대한 처방을 내리려는 시도가 시작되었다. Keynes(1936)의 一般理論이 그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때의 전체에 대한 인식은 기왕 존재해 왔던 미시경제이론과의 관련을 사상한 채 거시경제현상을 직관적으로 인지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 때의 인식은 예컨대 根本的 心理法則(fundamental psychological law)이라고 부른, 이 때 새로이 造語된 事象에 근거를 두고 있었는 바, 이 근본적 심리법칙이 과거의 미시경제이론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 것인지, 내지 그것이 과거의 미시경제이론과 혹시 모순·상반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는 하등의 검토도 없었다. 근본적 심리법칙의 미시적 근거에 대한 아무런 추적이 없이 직관적으로 인정되었을 뿐이었다.

거시경제에 대한 이 때의 직관적 인식과 기왕의 古典派的 視角을 종합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이른바 新古典派의 統合(the neoclassical synthesis)이다. 이곳에서는 Keynes(1936)에 의해 직관적으로 관찰된 관계가 기존의 화폐이론등과 결합되었으며, 각개 방정식에서 보여지는 여러 경제변수들 사이를 관련짓는 데는 신고전파의 限界理論(marginalism)이 이용되었다.

1950년대와 1960년대에는 신고전파 종합에서 쓰인 消費函數·投資函數·

貨幣需要函數 등 個別方程式이 왜 그 곳에서 쓰인 形態를 띠어야 하고 달리 定式化되어서는 안되는지와 관련하여 이른바 個別函數論에 대한 논구가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소비함수를 둘러싼 항상소득가설(permanent income hypothesis), 一生週期假說(life cycle hypothesis) 등이 나타났고, 투자함수와 관련하여 加速度原理(acceleration principle), 신축적 가속도원리(flexible acceleration principle) 등이 나타났다.

이러한 노력은 관심의 대상이 되는 개별함수의 미시적 기초를 추구한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 개별함수가 특정한 형태를 띠게 된다는 사정을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效用의 極大化 또는 利潤의 極大化 등의 論理가 쓰였는 바, 이것들은 미시경제학에서의 최적화행동과 수미일관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열역학(thermodynamics)에 의하면 個別的인 事件은 우발적이며 예측불가능하더라도 그러한 것들이 많이 집합되어 나타나는 전체현상은 상당히 규칙적인 法則性을 가진다고 한다. 거시경제이론의 개별함수론에서 경제전체에서의 소비나 경제전체에서의 투자등 集計的 行態를 설명하는 데 있어 미시경제이론의 최적화행위에 의거하려고 한 것은 다름아니라 열역학에서의 위의 논리를 원용한 것이었다. 이 때의 개별함수의 정당화는 A. Marshall(1920)에 의해 경제학에 처음 도입된 代表的 家計(representative household) 또는 代表的 企業(representative firm)이라는 개념을 이용해 이루어졌다. 이러한 대표적 가계나 대표적 기업의 행태는 잡다하고 많은 개별가계나 개별기업의 행태와 반드시 같을 필요는 없으나, 물리현상에서 크게 볼 때의 규칙성처럼 거시경제를 훌륭히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代表的 家計는 효용을 극대화하는 도중에서 소비를 결정하고 勞動力 供給을 결정한다. 代表的 企業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노동의 수요, 투자 및 생산량을 결정한다. 이들 代表的 家計 또는 대표적 기업이라는 경제주체는 각각 효용함수 또는 이윤함수를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一定한 制約條件에 당면하게 되는데, 가계에 대해서는 收入보다 지출이 클 수 없다는 豫算制約式(budget constraint)에, 기업에 대해서는 생산과정은 주어진 기술에 의존하는 生産函數(production function)에 지배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이러한 제약조건이 된다.

소비 투자 화폐수요 등 개별함수가 어떤 미시적 근거에 따라 그러한 형태를 취하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개별함수론은 신고전파 종합의 대표격인 이른바 IS-LM모델에서의 각개 방정식을 정당화할 수 있었다.[1] 그러다가 1960年代

(1) I-S모델은 투자-저축(invest-saving) 모델의 약어이고, L-M 모델은 유동성 선호-화폐 공급(liquidity preference-monetry supply) 모델의 약어이다.

末 내지 1970年代에 들어서면서 이러한 방식으로 거시경제현상에 대한 미시적 기초를 설명하는 것에 대한 限界가 인식되게 되었다.

우선 소비·투자·화폐수요 등 몇개의 개별함수에 대해 각각 개별적이고 상이한 방식으로 그것들의 미시적 근거를 추구하는 것 자체가 단편적임이 인식되었고, 그런 개별함수들이 어떤 일관된 원리에 따라 同時的으로 도출되게끔 하는 共通的인 미시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시각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런 시각은 Clower(1965), Barro와 Grossman(1971) 등에 의해 雙對的 의사결정(dual decision making)의 정식화로 대답되었다.

둘째, 모델의 각개 방정식이 일제히 정당한 미시적 근거 또는 合理性의 公準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특히 1970年代의 거시경제모델은 이 때의 인플레이션을 배경으로 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豫想値(inflationary expectation)라는 변수를 모델의 주요 구성요소로 지니고 있었는데, 이러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豫想値를 결정하는 방정식이 경제주체들이 合理的으로 행동한다는 공준 또는 모델의 다른 방정식에서 쓰인 공준을 따르고 있느냐의 여부가 논란거리로 되었다. 이 시절 흔히 쓰인 예상치의 결정메커니즘은 適應的 豫想의 假說(adaptive expectation hypothesis)이었는데, 이것이 작위적일 뿐 하등 내재적으로 合理性을 띠는 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 나아가 예상치의 결정방법도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되지 않으면 안되겠음을 인지하게 되어, 이른바 合理的 豫想의 假說(rational expectation hypothesis)이 널리 쓰이게끔 되었다.

셋째, IS-LM모델과 같은 신고전파 종합에서는 核心的인 요소가 아니라고 여겨져 주목되지 않았던 측면에 대한 탐색이 새로이 시작되게 되었다. IS-LM모델 등에서의 주된 관심은 국민소득수준의 결정 또는 고용수준의 결정이었다. 그 이면에서 임금률이 어떻게 결정되고 물가수준은 어떻게 결정되는지는 부차적인 관심밖에 끌지를 못하였다. 따라서 임금결정방정식이나 물가결정방정식이 있더라도 그러한 방정식의 미시적 근거에 대한 탐색은 이루어지질 않았다. 그러다가 1970年代 이른바 탐색이론(search theory)에 의해 노동공급에 대한 미시적 근거가 추구되었고 그와 더불어 임금이 어떤 근거에 의해 결정되는지도 설명하려고 하게 되었다(Phelps *et. al.*, 1970).

통화정책을 구사한다든지 석유파동과 같은 쇼크가 있다든지 하게 되면 生産量이 변할 뿐만 아니라 물가도 변하고 임금도 변하게 마련이다. 그런데 종래의 신고전파 종합에서는 이 중 생산량이 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주목하고 미시적 근거를 부여하면서 合理的으로 설명하려고 노력했으나, 물가나 임금이 변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1970년대와

1980年代에 나타난 많은 시도에서 이러한 남은 과제들이 다루어졌다. 이 때의 문제는 통화량을 증대시켰을 때 단기적으로 생산량은 신축적으로 늘어나나 가격은 빨리 적응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즉, 단기적으로 보아 통화의 中立性(neutrality of money)이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이었다. 나아가 이러한 사정은 시장참여자에 대해 情報가 불완전(imperfect information)하거나 생산물의 시장이 불완전 경쟁(imperfect competition) 시장이라는 조건을 도입하는 방식에 의해 설명되었다(Blanchard, 1990).

전술한대로 경제학은 거시적 경제현상을 다루는 거시경제이론을 가지고 있다. 나아가 그러한 거시경제현상은 合理化를 꾀하는 미시적 행동에 관한 논리에 의거하여 훌륭히 설명할 수 있다는 낙관론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경제학의 이런 전통에서는 거시적 경제현상은 거시적 차원에서의 構造에 의해 결정될 뿐이고, 그것이 미시적 행위와 근본적으로 독립적이라고 보는 社會學에서의 構造論과 같은 사고방식은 통용되고 있지 않다. 더 나아가 거기에는 미시적 행위에 근거하여 거시적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고 보는, 이른바 미시현상과 거시현상의 연계성에 대한 樂觀論도 介在되어 있다.

경제현상도 사회현상의 한 단면이다. 그럴진대 다른 사회과학 분야에서 個體의 合理的 行爲에 의한 거시적 현상의 설명방식과 超個體的 構造에 의한 거시적 현상의 설명방식의 兩極端 사이를 방황하고 있는 것과 달리, 개체의 合理的 行爲에 의한 전체의 形成에 대한 시각만 따르고 무조건 신뢰하는 경제학에서의 이러한 전통은 너무 나이브(naive)한 태도라고 비판받을 수 있겠다. 더구나 경제행위의 모든 것을 合理性의 기준으로 설명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은 人間이 모든 측면에서 언제나 반드시 合理的이지만은 않다는 점을 상기하고 볼 때 지나친 단순화요, 낙관론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과연 경제학의 논의에서도 人間行爲의 비합리적인 측면을 주목하고 있고 그에 따라 경제현상이 모두 合理性에 의해 설명될 수는 없다는 점을 보이는 예도 없지는 않은데, 아래에서는 이러한 이단적 예를 살펴보자.

Ⅳ. 경제문헌에서의 異端

합리적 행위를 하는 個體들의 行爲의 집합으로서 거시경제현상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보는 낙관론은, 만약 경제활동을 하는 개체가 반드시 合理的으로 처신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면, 크게 손상받게 된다. 더구나 반드시 합리적이지 않게 행동하는 개체들이 다른 종류의 개체들보다 더 중요하고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경제주체들이라고 할 때 이러한 손상의 정도는 매우 심

각해지는 수준에까지 이르게 된다고 할 수 있겠다.

전통적 설명에 따를 때 企業은 기초단위이고 이윤을 극대화하는 個體이다. 그러나 企業이란 경영자·주주·종업원·고객 등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되고 있으며, 기업의 행태란 이러한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처신의 결과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들 이해관계자들이 이윤의 극대화라는 기업목표와 반드시 합치하지 않는 논리에 지배되어 처신한다고 하면, 기업이 이윤극대화하는 個體라고 보는 인식은 修正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企業이라는 미시경제단위의 하부로 내려가 경영자·종업원 등 더 미시적(micro-micro)인 경제주체들의 행위를 추적해 볼 경우, 거시경제현상의 미시적 기초에 대한 종래의 설명은 흔들리게 된다는 점을 알 수 있게 된다.

이러한 修正의 원초적 시도를 Williamson(1964)의 經營裁量모델에서 찾을 수 있다. 이 모형에 따를 때 경영자들은 所有者·株主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 즉 이윤극대화를 꾀하기보다는 그들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정책을 추구할 수 있어 일종의 재량성을 가진다고 인식된다. 물론 주주들에게 최소한의 배당을 하지 않으면 경영자들의 지위가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 없다는 데서 어떤 일정한 수준 이상의 이윤을 확보한다는 것은 경영자들의 행위에 대한 제약조건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제약조건을 충족시키는 범위 내에서 경영자들은 봉급·안정성·권한·지위·위신 등을 복합적으로 추구한다고 본다.

이상 경영자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것이라고 한 요인 중에는 봉급과 같은 可測的인 것도 있다. 그러나 다른 요인은 대부분 측정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이윤극대화 가설로 축약될 수 없는 것이다. 예컨대, 부하 직원의 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경영자에게 가용 자원과 활동 범위를 증대시키는 것과 같아 경영자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경영자는 최소한의 이윤을 확보한 다음에 직원수를 늘리려고 할 수가 있다. 경영자들의 위신·권한·지위는 그들이 쓰는 판공비, 호사스러운 사무실, 승용차 등을 통해 받는 특별대우에 의존한다. 그런데 이러한 특별대우가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경영자들은 즉각 사임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런 특별대우는 기업이윤과 관련하여 보면 영(zero)의 生産性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즉 그것은 경영자에게 귀속되는 경제적 지대(economic rent)이고, 사회적으로 보면 슬랙(slack)이다.

그러나 이러한 슬랙은 늘상 존재하는 것이다. 企業의 실제에서 볼 때 이러한 슬랙이 모두 배제된 상태에서 오로지 이윤극대화만이 추구된다는 사정은 용인되기 어렵다. 결국 거시적 경제현상의 미시적 기반이 되고 있는 이윤극대화라는 행위규범도 超微視的인 기준에 의해 볼 때에는 非實際的인 허구일 수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은 Cyert와 March(1963)에 의해 정리된 行動主義的 企業理論에서도 보여진다. 이들에 따를 때 기업이란 각각 상이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경영자 · 노동자 · 주주 · 고객 · 중간제품공급자 · 은행가 · 세무공무원 등의 연합체로서, 기업의 목적은 이들 각각의 요구에 의존한다고 본다. 이러한 요구는 이들의 욕구의 내용, 요구를 하고 나서 과거에 이루었던 成功의 정도, 성공에 대한 예상, 다른 기업에서의 사정, 이용할 수 있는 정보 등등에 의존한다고 본다. 그런데 각개 구성원의 요구는 원칙상 모두 충족되어질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사이에서는 경합과 타협의 과정이 계속되게 된다.

일반적으로 보아 구성원이 많을수록, 그들의 요구가 클수록, 또 각개 구성원집단이 추구하는 목적이 다기하고 상이할수록 의사결정은 어려워진다. 이런 가운데 기업은 결국 이러한 요구와 목적이 '만족할만한' 전반적 성과를 이루게끔, 다시 말하면 滿足化하게끔(satisficing), 각종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결국 만족화행동은 기업이 당면하는 內的 · 外的 制約을 받아들이면서 이루어지는 合理的인 처신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이윤극대화하는 것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것이기에 限定된 合理性(bounded rationality)을 가지는 것이다. 그것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大局的 合理性(global rationality)과 다른 것으로, 時間 및 情報 등이 제한된 상황에서 구체적인 결정을 내려야 할 경우 당시 알 수 있는 몇 가지의 代案을 검토한 후 그 중 최선의 것을 선택한다고 보는, 매우 局地的이고 실제적인 것이다.

이상 예시된 超微視的 視角 내지 그것이 의미하는 실제적 기업관을 따를 때, 거시적 경제현상을 최적화를 꾀하는 개체의 行爲에 의거하여 구성할 수 있다고 보는 경제학에서의 樂觀論은 우선 그 출발점으로부터 제약받게 된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불완전한 미시적 기초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 그렇게 不安定한 기반을 가지고서는 전체적 구도를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가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보다 근본적으로 보면,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한다고 보아 利己的이라고 보는 경제학의 사람에 대한 시각은 모든 사람에게 통용될 수 없는 잘못된 시각일 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利己的 人間觀에 따라 여러 사람이 처신하게 되면 사회전체로서는 自己敗北식의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겠다. 결국 경제학에서의 個體에 대한 인식방법은 잘못된 것일 수 있으며, 이렇게 잘못된 人間觀을 가지고 개체를 이해하고 그것에 근거하여 사회전체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더욱 잘못된 것일 수가 있다. 經濟學에서의 낙관론과 그것의 근저에 있는 미시적 기초는 경제학에서만 통용되는 아집에 불과할 수가 있다.

경제학의 학습이 사람을 보다 이기적으로 만들고, 그 결과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들의 행동이 다른 학문을 공부한 사람들의 행동과 다소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예시한 재미있는 실험이 있다. 미국 코넬대학의 경제학자 1명과 心理學者 2명이 함께 한 一連의 실험은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합리적으로 행동하다 보니 이기적이고 非協調的으로 되고 있으며, 이는 경제학 공부가 사람들을 非協調的인 방향으로 변질시켜 가지 않느냐 하는 의아심을 가지게 한다는 것을 추출하고 있다(Frank, Gilovich, and Regan, 1993).

이 중 첫번째 실험은 일단의 대학원생들에게 일정한 돈을 주고 그것을 個人的인 부분과 公共的인 부분으로 나누도록 요망하는 방식으로 시작되었다. 이 실험에서의 분배원칙은 다음과 같았다. 우선 각 개인은 받은 돈을 개인적 부분과 공공적 부분으로 나누어야 한다. 이 때 개인적인 것으로 배분한 것은 모두 자기 개인의 몫이 된다. 그러나 공공적인 부분으로 배분한 것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공공적인 부분으로 배분한 것과 합쳐진 다음 그런 것의 合計의 몇 배 만큼을 추가한 뒤 모든 사람에게 均等配分한다. 이런 분배법칙에 의거할 때 학생들 전체의 입장에서 보아 가장 큰 소득을 갖게되는 방법은 모든 학생들이 각각 자기에게 배당된 돈을 모두 公共的 部分에 배분하는 경우가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파이(pie) 全體를 극대화할 수 있고 그 결과로서 균등배분되는 개인 몫도 커질 수 있겠기 때문이다.

반면에 이기적인 개인으로서 보면 최선의 대응은 자기에게 배분된 모든 돈을 자기 개인의 몫으로 배정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에게 재량권이 부여되 있는 모든 돈은 자기가 차지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처신에 따라 참여자 모두에게 共通的으로 돌아오는 몫도 차지할 수 있겠기 때문이다.

실험에서 학생들은 다양한 대응을 했다. 경제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평균잡아 20% 정도를 공공부분에 할당했다. 반면에 경제학전공이 아닌 학생들은 평균잡아 50% 정도를 공공부분에다 할당했다. 이 결과는 실험자들로 하여금 경제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부지불식간에 더 이기적으로 되어 있고 公平性에 대한 감에 취약하다고 해석하게 하였다.

두번째 실험은 100이라는 돈을 자신과 다른 사람 사이에서 나누도록 하는 게임이었다. 이 때 돈을 먼저 나누는 사람이 100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먼저 결정하고, 다른 사람은 그러한 결정을 따를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최초의 배분결정을 따를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두번째 사람이 첫번째 사람의 배분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하면 최초의 배분결정에 따라 최종배분이 확정된다. 그러나 두번째 사람이 첫번째 사람의 배분결정을 받아 들이지 않기로

하면 나눈 사람이나 받는 사람 모두가 아무 것도 갖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게임의 규칙 하에서 배분하는 첫번째 사람이 자신에게 최선이 되는 배분을 고집하려고 한다면 자신은 99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1을 줄 것이다. 이 때 이런 결정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는 두번째 사람은 그러한 결정을 거부하고 1도 가지지 못하게 되는 것보다는 1이라도 갖는 것이 낫다고 볼 것이기에, 만족스럽지는 않더라도 99와 1로 나누는 결정을 따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 철저한 이해타산과 관계없이 두 사람 사이에서 100을 공평하게 나누는 방법은 아무래도 50 대 50으로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어쨌든 이러한 실험에서 99 대 1로 나눈 학생은 경제학을 전공하는 학생 중에서 월등 많았다. 경제학을 공부하는 학생이 게임의 狀況에서 利己主義的으로 처신하는 데 훨씬 더 철저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公平性에 대한 意識이 본래 미약한 사람이 경제학을 공부하는가, 아니면 경제학을 공부하게 되면 보통 사람도 公平性에 대한 感이 무뎌지고 利己的으로 되는가? 코넬 실험팀은 이런 질문에 대답하기 위하여 게임理論과 産業組織論을 공부한 학생群, 경제발전론을 공부한 학생群, 그리고 天文學을 공부한 학생群을 상대로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설문조사의 결과 게임이론과 산업조직론을 공부한 학생들이 가장 덜 公平하고 덜 正直하며, 천문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가장 公平하고 정직하며, 경제발전론을 공부한 학생들은 그 중간에 위치함을 알아 내었다.

실험팀의 결론은, 경제학의 영향력이 이러할진대, 경제학 공부를 어느 정도 억제하든지 아니면 경제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경제학 공부와 더불어 반드시 心理學도 공부하도록 하든지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상은 經濟學에서의 利己的 人間像 또는 合理的 行動에 대한 視角이 경제학에서의 특유한 것이며, 돈을 나누는 등 경제적인 문제에 당면하여서도 경제학적인 논리에 쇠뇌되고 훈련된 사람이 아닌 보통 사람들은 경제논리에 쇠뇌된 경제학자들과 다르게 처신하리라는 가능성을 적절히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경제학에서 보이는 바 최적화를 꾀하는 인간상은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따르는 인간상이 아니다. 세상에는 다른 종류의 사람이 더 많다. 따라서 그러한 인간상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미시경제의 논리는 한정적인 通用性 밖에 가지지 못할 것이다. 그럴진대 모든 사람이 합리화를 꾀한다는 미시경제학의 시각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 진다. 나아가 이렇게 한정된 微視的 기반을 가진 미시이론을 받아들여 거시현상에 확대 적용한 거

시경제현상의 理解도 역시 不完全한 것으로 된다. 결국 다른 종류의 사회과학과 달리 경제학이 全體 내지 構造 자체에서의 法則性을 부인하고 그 밑의 미시적 근거를 중시하려 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시도는 널리 공감될 수 없는 시도, 또는 制限된 有用性밖에 못가지는 시도로 될 수 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경제학에서의 논의 모두가 合理化를 꾀하는 個體에 근거하는 全體 社會現象의 구축가능성에 대해 전폭적인 찬성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앞에서 거시경제모델과 관련하여 종래 널리 쓰였던 適應的 豫想(adaptive expectation)의 가설을 따르는 방정식이 모델의 다른 방정식과 달리 合理性을 결여하고 있어 혼용될 수 없게 되었고, 그 假說을 대신해서 合理的 豫想(rational expectation)의 가설이 왕자의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음이 언급되었다. 합리적 예상의 가설은 사람들이 예상을 함에 있어 당시 주어진 情報에 의거하면서 최선으로 예상을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최선의 예상이란 설사 개개의 경우 예상에 잘못이 있더라도 그런 것의 平均은 영(zero)이 되고, 그런 잘못은 하등 규칙성있는 패턴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합리적 예상은 예상의 방법 중 가장 정확하다는 것이다.

예상을 할 때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지 못하기가 쉽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각종 경험을 하게 되면서 사람들은 많은 정보를 가질 수 있게 되어 올바른 예상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합리적 예상의 가설은 장기균형상태에서는 반드시 타당하게 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이자율의 수준에 대한 예상을 하는 경우 합리적인 예상을 한다면 이자율은 어떤 올바른 경제모델에서 이자율이 결정되는 방식에 의해 결정되리라 예상하게 될 것이고 어떤 작위적(ad hoc)인 방식으로 결정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올바른 경제모델이 IS-LM모델이라고 할 경우 이자율은 그 곳 모델에서의 결정방식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아야 하며 지난 기나 지지난 기의 이자율의 어떤 작위적 加重平均값으로 결정될 수는 없을 것이다.

어떤 변수의 예상치를 그 변수의 결정과정 및 그것에 관련된 정보에 의해 결정한다는 합리적 예상의 가설은 매우 강한 호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어떤 변수가 반복되는 현상에 관련된 것이라고 할 때 이러한 예상 방법의 타당성은 매우 클 수가 있다.

경제모델에서 쓰일 수 있는 豫想値決定의 메커니즘 중에서 오직 合理的 豫想의 메커니즘만이 일제히 合理性을 추구하는 行爲의 結果로서 도출된 모델의 다른 方程式들과 모순없이 和合할 수 있으며, 合理性의 公準을 가지는 經濟學

의 전통에도 맞는다고 보는, 이러한 合理的 豫想의 메커니즘은 여러 가지 含蓄을 가지게 됨으로써 그 영향력을 증대시키게 되었다.

합리적 예상의 가설은 우선 경제정책의 효과가 그 이전에 생각하던 것과 크게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추론하게 하였다. 사람들은 一時的으로 경제정책의 내용을 모르고 그것이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어떠한 效果를 가지게 될 지에 대해서도 모를 수가 있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하면서 사람들은 이들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게 될 것이고 종국적으로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豫想値를 그것에 맞게금 조정하면서 행동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종국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 중에는 정책당국에 의한 정책구사도 포함된다. 따라서 정책당국이 사람들의 理解不足을 전제로 하고 정책을 운영했는데, 사실은 사람들이 정책내용과 효과를 잘 알고 있었다면 사람들의 대응이 달라질 것이다. 그에 따라 정책당국은 의도한 것 이외의 效果에 당면하게 될 것이고, 그 때문에 정책적 실패를 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합리적 예상의 가설에다 가격이 즉각적으로 적응한다는 가설을 합하면 어떤 정책적 조치이든 그것이 예상 밖의 깜짝 놀랄 사건(surprise)이 아니면 아무런 효과도 가질 수 없다는 命題, 즉 정책無力性의 命題가 도출된다. 종래 長期필립스곡선(Philips curve)을 가지고 논의하는 데서 수요관리정책은 장기적으로는 국민소득에 대해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하는, 이른바 長期에 있어서의 需要管理政策의 無力性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그런데 합리적 예상의 가설은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기 위해 가격이 즉각적으로 적응하고 사람들이 豫想을 合理的으로 하는 한, 장기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단기에 있어서도 수요관리정책은 국민소득에 대해 하등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게 된다는 含意까지 끄집어내게 된 것이다.

合理的 豫想의 假說은 이른바 루카스批判(Lucas critique)에서도 그 모습을 들어내고 있다. 전통적으로 어떤 정책의 효과를 알아 보려는때 計量經濟모델을 쓴다. 다기한 계량경제학의 技法을 써서 계량경제모델 내의 각종 방정식을 추계한 뒤, 그 곳에서의 정책변수를 변화시키면서 그것이 가져오는 내생변수의 변화를 보고 그러한 정책의 효과를 추정한다. 그런데 루카스비판은 이러한 관행을 신랄하게 비판한다. 기존방법에서는 각종 방정식을 추정하여 그 곳의 여러 가지 母數(parameter)를 얻는데, 이러한 방법은 정책변수의 값이 어떠하든 모수는 주어진 常數라고 보기 때문에 용인되는 것이다. 그러나 루카스비판에 의하면 이렇게 추정된 모수는 결코 상수일 수가 없으며, 사실상 정책변수의 함수라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이 바뀌면 모수의 값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합리적 예상 내지 루카스비판을 받아들일 때 경제학에서 경제정책은 별 쓸모없는 것이 된다. 그것은 하등 無力한 것일 수도 있고, 또 계량경제모델 등을 통해 얻으려는 바 통상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결과와 전혀 다른 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합리적 예상의 논의는 경제학의 公準인 合理性을 거시경제현상에서의 豫想値의 形成에까지 확대시킨 것이다. 그것은 거시경제현상의 모든 것이 合理性의 追求라는 單線的 微視的 基礎에 의거한다고 할 때 결과적으로 나타날 논리적 귀결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경제사회에서의 사람들의 예상치 형성은 반드시 合理的이지 않을 수가 있다. 나아가 설사 그것이 合理的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상당히 긴 長期에서나 그러할 뿐, 단기적으로도 사람들이 언제나 合理的 豫想의 방법을 따른다는 증거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실상 경제사회의 여러 구성원들에게 주어지는 情報는 동일할 수가 없으며, 정책당국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비교해 보아 개인들이 가지는 정보는 내용 및 可用時點에 있어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 그러한 정보를 이용하는 능력면에서도 정책당국과 개인 사이에서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거시경제현상은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情報의 質·量面에서 차이를 가지고 있고 그것의 處理能力面에서도 차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행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며, 또 制度的·因習的 要因에 의해서도 지배받는 것이다. 후자와 관련하여, 예컨대 賃金交涉은 2-3년만에 한번씩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일단 임금교섭을 끝낸 후 다음 교섭시기까지는 설사 새로운 사태가 전개된다고 하더라도 임금교섭을 다시 하자고 할 수가 없다. 이러한 때 가격이 수급을 균형시키기 위해 즉각 적응하지 않음은 말할 것도 없고, 豫想値를 항상 合理的이 되게끔 계속 조정할 수도 없다. 즉 合理的 豫想의 메커니즘은 論理的으로 추구하면 수긍될 수 있는 것이나 사실상 非實際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이 반드시 통용되는 현상이 人間의 經濟現象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이에 따라 Krugman(1991)은 개방거시경제모델의 주류파 견해(mainstream view)를 요약하는 과정에서 合理的 豫想의 假說 대신 다시 適應的 豫想의 假說(adaptive expectation hypothesis)을 이용하고 있다. 경제현상은 철저히 合理性의 公準에 의해 여과될 수는 없는 것이며, 특히 거시경제현상의 이해는 지나치게 논리적으로 흐리기보다는 실제적이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인 것이다.

長期的으로는 우리는 모두 죽는다(In the long-run we are all dead). 따라서 장기에서나 통용되는 사실은 우리가 살아있는 短期 또는 中期의 時界

(time horizon)을 가지고 볼 때 별 쓸모가 없는 것일 수 있다. 단기 내지 중기의 경제현상을 다루는 거시경제모델에 있어서는 장기에서나 타당한 合理的 豫想의 假說보다는 단기 내지 중기에서 실제적이라고 여겨지는 適應的 豫想의 가설이 더 타당하다고 보여질 수 있다.

合理的 豫想에 대한 논의는 거시경제현상이 모두 合理性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전통적인 미시이론과 미시적 기초를 共有해야 한다 등의 생각을 경제학에 심어 주었다. 논리적인 추론을 중시하는 한 합리적 예상에 대한 논의가 경제학에 끼친 공헌은 절대적이다. 그러나 이것은 거시경제현상의 논의를, 특히 단기에 있어서, 合理的 豫想이 非實際的인 정도 만큼 비실제적으로 만들었다. 그렇지 않아도 경제학은 다른 사회과학에 비해 全體 내지 構造의 영향력에 대해 소홀하다는 弱點을 가지고 있어 경제현상의 이해가 單調롭고 비실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합리적 예상에 관한 논의는 이를 더욱 가중시켜 거시경제현상에 대한 이해를 더욱 비실제적으로 만들었다는 비판을 모면하기 어렵게 되었다.

Ⅴ. 경제학이 他社會科學에서 배워야 할 것과 경제학이 他社會科學에 기여할 수 있는 것

사회현상의 일종으로서의 경제현상은 거시적이고 직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다고 할 수도 있고, 그것의 근저에 확고한 미시적 기초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거시적 현상만이 존재하고 이것에 그 자체의 규칙성이 있을 뿐 그것과 미시적 현상이 어떻게 연관될 수 없다는 견해와 그러하지 않다는 견해는—이들 양 극단의 견해의 중간에서 다소간의 변종이 있기는 하나—서로 타협할 수 없는 절대 상이한 인식이라 할 수 있다.

다른 사회과학분야에서는 이들 두 가지 상이한 인식이 모두 나타나고 있고, 그에 따라 그들 중 이 극단과 저 극단을 지지하는 견해들이 모두 존재하고 있는데 비해, 경제학에서는 미시적 행위와 그것에 기반을 둔 거시적 현상만이 인정되는 한 쪽의 견해가 주된 위치를 차지해 오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單線的인 인식을 하는 데 있어 경제학은 合理的 人間像을 그것의 밑바탕에 깔고 있다.

그러나 경제현상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너무 단조롭고 나이브한 것이다. 그러한 이해는 경제현상이라고 하여 정치현상·문화현상·사회현상들과 완전히 區分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이들 중 경제현상이 아닌 다른 사회현상에 대한 인식은 그다지 단조롭고 나이브(naive)하지 않다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전

적으로 수긍될 수 없는 한계를 가지는 것이다. 나아가 이것은 경제학의 문헌에서도 비판되기도 하는 것, 또는 경제학에서도 만장일치의 공인을 받는 것도 아니다.

모름지기 人間의 행위는 철저히 合理的일 수 없으며 감정이나 군중심리 등에 의해 크게 좌우될 수 있는 여지를 가지는 것이다. 경제행위라고 하여 최적화를 꾀하는 合理的 行爲만으로 될 뿐 다른 여지는 없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心理的인 요인이나 상황여건에 의해 상당히 지배받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경제학에서의 미시현상과 거시현상 사이를 오가는 單線的 樂觀論은 비판받아야 한다. 그것은 다른 사회과학분야에서 그러한 것처럼 여러 가지 가능성을 포괄할 수 있게끔 일반화되어야 한다.

人間은 合理的이지만 않고 非合理的으로 처신하기도 한다. 경제행위도 합리적일 수도 있고 비합리적인 행동일 수도 있다. 그러한 즉 후자의 가능성을 배제한채 구성된 경제학의 경제현상에 대한 이해는 바이아스(bias)를 가진 것으로 되기 쉽다. 이에 따라 정통 경제학에서 경제현상을 이해하는 것이 비실제적으로 될 수 있다는 점은 심각하게 자성되어야 한다. 다른 사회과학분야에서 사회현상을 복합적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새삼 인지해야 하고, 더불어 경제학도 경제현상을 이해하는데 있어 지나친 單線化를 꾀해서는 안되겠음을 알아야 한다. 경제현상을 오로지 合理的인 것만으로 경사지게 생각하다가 경제의 실상을 비현실적으로 잘못 이해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되겠기 때문이다.

경제학의 이해는 單線的이기 때문에 비실제적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단선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회과학 분야에서의 설명보다 덜 추상적이고, 그 때문에 한정된 범위 내에서이지만 설명력이 강하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경제학에서의 논의는 모델을 수단으로 하여 진행된다. 모델을 가지고 진행하는 논의는 수학에서의 여러 기법을 사용할 수 있어 논의가 정확성을 띠면서 손쉽게 전개될 수가 있다. 다른 사회과학분야에서의 논의에서 간혹 나타나는 논리적 비약을 철저히 피할 수 있다.

모델을 수단으로 하는 경제학에서의 이러한 논의 전개방식은 경제현상에 대한 세세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경제학에서 기계적이거나 기술적인 논의를 통해 밝혀진 거시경제에 관한 많은 명제는 거시경제현상에 대한 많은 사실을 밝히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다른 사회과학분야에서도 경제학에서의 이러한 논의 전개방식을 배워 일차적으로는 거시적 사회현상의 本質과 內容을 밝히고, 다음에 그러한 거시적 현상의 미시적 근거도 밝힐 수 있도록 되어야 할 것이다.

경제학은 경제현상을 다루는 데 있어 다른 사회과학분야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변수를 구사한다. 이러한 변수들 중에는 定量化할 수 있는 변수들도 많지만 그러하지 않은 것들도 있다. 경제학은 반드시 정량화할 수 없는 변수들도 이용하면서 경제현상을 분석함으로써 여타 분야보다 더 상세히 경제현상의 본질과 내용을 밝히고 있다. 물론 이러한 분석의 대부분은 經濟人은 合理的이라는 지극히 단순한 가정에 의거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사회과학 분야도 경제학에서의 이러한 분석적 노력을 참조하고 따라야 할 것이다. 사회현상 내부에서 어떠한 인자들이 서로 作用·反作用을 하는지를 알아 사회현상의 내용과 본질을 이해하는 정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方向의 理解 高度化는 직접적으로 全體 내지 構造를 인식하는 데 별 도움이 안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분석과정에서 얻어진 理解增進과 직관이 全體的 構造를 파악하는데 불가결한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다른 사회과학에서도 構造를 인식하고 더구나 그 근저에 있는 미시적 근거를 인식하는 데 있어 경제학에서와 같은 세세한 분석과정을 따라야 할 것이며, 그 과정을 통해 많은 기초자료를 쌓도록 해야 할 것이다.

全體를 올바로 인지하는 데에는 構造 그 자체를 직관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제1차적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보더라도 전체에 대한 이해만을 고집할 뿐 그것의 근저에 있는 세세한 사실 및 이러한 미시적 현상의 거시현상에서의 發現을 전적으로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전체 구조에 대한 이해도 構造內部의 사실과 관계의 이해를 통해 훨씬 充實化되고 高度化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구조 내부의 사실이나 관계의 이해를 위해서는 經濟學에서의 方法論을 뒤따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되든가 아니면 대단히 유용한 방법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Alexander, J.C., and B. Giesen

1987 "From Reduction to Linkage: The Long View of the Micro-Macro Link." In J.C. Alexander, B. Giesen, R. Münch, and N.J. Smelser (eds.), *The Micro-Macro Link*. pp.1-42.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Attfield, C., D. Demery, and N. Puck

1985 *Rational Expectations in Macroeconomics*. Cambridge, Massachusetts: Basil Blackwell.

Barro, R.J., and H.I. Grossman

1971 "A General Disequilibrium Model of Income and Employment." *American Economic Review* 61(1): 82-93.

Blanchard, D.

1990 "Why Does Money Affect Output? A Survey." In B. Friedman, and F.H. Hahn (eds.), *Handbook of Monetary Econmics*, vol. II. Amsterdam: North Holland.

Clower, R.W.

1965 "The Keynesian Counterrevolution: A Theoretical Appraisal." In F. H. Hahn, and F.P.R. Brechling (eds.), *The Theory of Interest Rates*. London: Macmillan.

Cyert, R., and J. March

1963 *A Behavioral Theory of Firm*.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Hall.

Diamond, P A.

1982 "Aggregate Demand Management in Search Equilibrium."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0(5): 881-94.

Durkheim, E.

1938 *The Rules of Sociological Method*. New York: Free Press.

Feiwel, G. (ed.)

1985 *Issues in Contemporary Macroeconomics and Distribution*. London: Macmillan.

Frank, R.H., T. Gilovich, and D.T. Regan

1993 "Does Studying Economics Inhibit Cooperation?"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 7(2): 159-71.

Friedman, B., and F. Hahn (eds.)

1990 *Handbook of Monetary Economics*. Amsterdam: North-Holland.

Howitt, P.

1985 "Transaction Costs in the Theory of Unemployment." *American Economic Review* 75(1): 88-100.

Huber, J. (ed.)

1991 *Macro-micro Linkages in Sociology*. Beverly Hills, California: Sage Publications.

Keynes, J.M.

1936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 London: Macmillan.

Krugman, P.

1991 *Has the Adjustment Process Worked?* Washington, D.C.: Institute of International Economics.

Lucas, R.E., and T. Sergent

1979 "After Keynesian Economics." *FRB of Minneapolis Quarterly Review*.

Marshall, A.

1920 *Principles of Economics*. London: Macmillan.

Mead, G.H.

1934 *Mind, Self, and Socie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helps, E. *et. al.* (eds.)

1970 *Microfoundations of Employment and Inflation Theory.* New York: Norton.

Philips, A.W.

1958 "The Relation between Unemployment and the Rate of Change of Money Wage Rates in the United Kingdom, 1861-1957." *Economics* Nov.: 283-99.

Sinclair, P.

1983 *The Foundations of Macroeconomic and Monetary Theo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Williamson, O.E.

1964 *The Economics of Discretionary Behavior: Managerial Objectives in a Theory of the Firm.*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Hall.